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병식  
초당대 총장

### 21세기 미래 사회, '안전'이 먼저다

표해 오고 있다. 미국 정보위원회(NIC)의 미래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일본 정부의 '이노베이션 2025', 영국 국방성 산하 발전 구상 독트린센터의 '전략적 글로벌 트랜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이 보고서들을 정리, 요약해 보면 미래의 거시적 변화를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예견하고 있다. 환경과 자원문제의 심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 및 글로벌화, 인구 구조 변화, 기술의 융합과 가속화, 안전과 보 등을 변화 방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세계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이 트렌드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트렌드가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벌써 우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분석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의 안전'에 관한 노력이다. 재해, 재난의 문제는 이제 세계 모두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안전은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비롯하여 대규모 자연재해 및 인재(人災)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도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주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흐름인 미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난 2012년 6월 우리나라에는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되었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어 선진국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진정성, 대응하는 자세는 너무나 취약하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 압축 성장의 대가가 물질적·정신적 요인으로 남아, 우리 주변 곳곳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는 변화된 기후의 영향을 받아 대형 태풍, 홍수 등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고, 지진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최근의 몇몇 경우만 보더라도, 즉 1년여 전의 불라빈 태풍, 전국적 순환 정전사태, 금년 초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붕괴사고 등에서 보듯이 곳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전, 고속철도, 지하철, 가스관, 송유관, 초고압 전력망 등 고도의 대형 시설물 등이 좁은 국토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북한과의 충돌이나 테러 가능성, 이른바 북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종합적인 대응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해양교통, 항공, 통신망 및 금융 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등의 사고는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망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생명과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통합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 관련 업무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이 주도하고 있는데 화재, 가뭄, 폭우와 홍수 등에 치중되어 있다. 급증하는 산업 재해와 대형 인재에서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능히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안전에 대한 이해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인은安心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난 진행에 대한 정보와 대처 요령 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체계와 인프라도 잘 마련되어야 한다.

생텍쥐베리의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300여명이나 가슴에 묻고 말 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절규하며 '안전한 사회'를 갈망해 본다.

### 의료칼럼

### 교정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조진형  
전남대치과병원 교수

까운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한 부정교합의 원인이 존재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의 시기가 다르며, 더 나아가 아이들마다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해오면서 어렵지 않은 교정치료는 없었던 것 같지만 더욱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점은 모든 환자가 모두 다른 부정교합의 원인과 정도를 가지고 있고, 환자마다 다른 결과와 끝말도, 치아 형태 및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교정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교정학회에서는 90년대에 이미 교정치료 시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캐파인을 벌인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면 교정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다.

우리나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정도가 되리라 생각한다. 왜 7세에 교정검사를 권장하는 대체적인 캐파인을 벌이게 되었을까? 바로 이 교정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에 맞는 교정치료의 시기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 7세가 되면 7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이나 부정확했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며, 7세 이후에 검

사를 하게 되면 7~8세경에 꼭 필요한 교정처치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7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일까? 첫 번째로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성장 양상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턱(악골)의 성장은 아이들이 완전한 성인으로 무너져서 어려운 점은 모든 환자가 모두 다른 부정교합의 원인과 정도를 가지고 있고, 환자마다 다른 결과와 끝말도, 치아 형태 및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안타깝게도 교정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면비대칭분석을 통해 비대칭적 성장양상도 파악이 가능하다. 특히 과거에는 2차원 방사선사진을 가지고 시행하던 분석이 최근 치과용 콘빔씨터와 3차원 영상 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골격 및 연조직 분석법이 개발돼 매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두 번째로 상악과 하악 치아의 발육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시기이다. 7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불리고 있는 제3대구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치아는 모두가 유치다. 이 유치들이 있는 공간과 나중에 맹출할 영구치의 크기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치아의 불규칙한 정도나, 나타날 수 있는 치아사인의 공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협조가 비교적 용이한 시기라는 점이다. 4~5세의 어린 아이들이 치과를 방문해 치아모형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고, 커다란 방사선 활영기계에 흘러 서서 활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낮은 환경에서 낮은 사람들을 틈에서 구강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교정검사를 받음으로써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치료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다. 치아의 결손이 있는지 또는 과잉치가 있는지, 치아의 맹출 방향이 정상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시기이다.

세 번째로 치아와 악골의 크기를 비교해 영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세가 되면 상악과 하악 모두 유치 최후방에 제1대구치라 불리는 매우 중요한 영구치가 제일 먼저 맹출하고 이어서 하악과 상악의 절치(앞니)가 나오게 된다. 맹출한 제1대구치와 앞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치아는 모두가 유치다. 이 유치들이 있는 공간과 나중에 맹출할 영구치의 크기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치아의 불규칙한 정도나, 나타날 수 있는 치아사인의 공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협조가 비교적 용이한 시기라는 점이다. 4~5세의 어린 아이들이 치과를 방문해 치아모형을 위한 인상을 채득하고, 커다란 방사선 활영기계에 흘러 서서 활영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낮은 환경에서 낮은 사람들을 틈에서 구강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교정검사를 받음으로써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교정치료의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요하다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시를 대상으로 작물 성수기에 맞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씨감자는 2월말~4월, 과수묘목, 복제소는 3~4월, 김장을 채소는 8~9월, 버섯종균은 9~10월, 마늘 등 영양체는 연중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종자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판신고 제도 홍보, 품질표시를 중심으로 법규 준수 지도 등 선진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보다 비싼 종자인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종자유통질서 확립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경우 기력이 있다.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와 경제 이익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종자 시장 스스로가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기고

### 종자산업 발전하려면 유통 질서 확립부터



이경일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다. 주인공 입장의 상도는 '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라 할 수 있다. 즉, 재물은 물과 같아서 독점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 재물에 의해 망하고, 사람은 저울과 같이 바르고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파멸을 맞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한 문장은 최대의 거성이었던 임상옥의 철학이었다.

거상 임상옥의 상도가 왜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 불법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의 달콤함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운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 알의 조그만 종자에는 생명의 복잡다단하고 신비로운 특성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인듯 보기는 다 같은 종자처럼 보이지만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여부 등에 다를 수 있다. 종자의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여부 등은 농업인 소득,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품종, 발아율 등을 농업생산성이 직결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며 문제이다.

농업인들이 품종, 발아율을 육안으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은

국민건강,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품종·발아율 및 발아 보증시한 등 종자 품질 표시, 종명·품종명·이품종명·유숙기간·수량 등 보증표시, 종자 가격표시 등을 해야 한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통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금지 및 수입승인이 되지 않은 종자 품종, 품수, 유제, 면화 등의 LMO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종자, 집단적으로 재배되는 축제장 및 집단재배지의 작물체 등의 시료를 수거해 국내 유통종자와의 LMO 혼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LMO 종자는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후배 교배종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LMO 종자 유통 방지는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시를 대상으로 작물 성수기에 맞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씨감자는 2월말~4월, 과수묘목, 복제소는 3~4월, 김장을 채소는 8~9월, 버섯종균은 9~10월, 마늘 등 영양체는 연중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종자 유통조사와 함께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판신고 제도 홍보, 품질표시를 중심으로 법규 준수 지도 등 선진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보다 비싼 종자인 신品种 개발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종자유통질서 확립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경우 기력이 있다. 품질 향상,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와 경제 이익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종자 시장 스스로가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社說

### 참사 관련 망언 쏟아낸 지만원씨 단죄해야

터무니 없는 언행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보수 녹색 지만원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얼토당토 않은 망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 모두가 크나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를 5·18과 연결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당시 차지했던 입장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획책한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손을 써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 세월호가 진도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누구보다도 참담한 심정인데도 대체로 사고와 5·18이 무관연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어 그는 "무능한 박근혜 퇴진"과 아울러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봉기가 바로 북한의 코앞에서 벌어질 모양"이라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도 했다. 피해자를 욕보이고, 역장이 무너지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지씨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씨는 과거 배우 문근영을 향해 '빨치산' 발언을 하고, 신문에 5·18 민주화 운동을 '소수의 좌의' 복수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폭동"이라고 광고했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렇듯 이미 이성을 잃은 지씨라면, 이번 발언은 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경찰은 지씨의 망언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악성 유언비어를 발본색원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한 만큼 지씨가 다시는 혐오받을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도록 단죄해야 한다. 그래서만 광주·전남 지역민은 비롯한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가라앉게 된다는 사실을 사법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

### 언제까지 학교폭력에 희생돼야만 하는가

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광주에서 이달 초 일주일 새 3명의 학생이 잊혀져 자살한 이후 4주 만에 또 다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밤 10시께 광주 아파트에서 A군이 투신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한다.

A군은 유서에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들의 이름과 내용을 언급하고 두발 단속 등 학생인권문제,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 등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 전 학생들에게 폭언을 빼앗겼거나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을 처벌하지 않고, 적당히 처리해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잇따른 학생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한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경남 진주지역의 한 사립고에서는 학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져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이 얼마나 희생돼야 학교폭력에 근절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마 지역민은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들의 자살로 우리 사회가 끊어지게 되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다.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교육당국은 불도저식·여론몰이식·전시적 정책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상과 문제의 본질을 짚어 학교 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상담 전문가의 학교 배치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입시 중심 교육과 경쟁·